

“삶의 모든 순간을”… 여성·어린이·고령자 맞춤형 보험 확대

보험상품, 생애주기 역할 커진다

카카오페이손보, 어린이 성장 단계별 현대해상, 임신·출산기·노화기까지 신한라이프, 치매예방·장기요양 보장

100세 시대를 맞아 생애주기별 보험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상품도 다양해졌다. 영유아보험은 물론 치매간병보험 및 종신보험 등 생애주기별 상품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상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생애주기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가는 삶의 연속 주기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 5월 영유아보험을, 8월에는 초중학생보험을 선보였다. 영유아보험은 응급실 진료비 및 수족구·독감·폐렴·중이염과 같이 0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생애주기별 보험 이미지.

~5세 영유아기에 걸리기 쉬운 질병만 모아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초중학생 보험은 응급실·독감·교통사고·골절·화상·식중독 등 6~15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만 보장한다.

두 상품 모두 당장 필요 없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장까지 수십 년간 유지

해야 하는 기존 어린이종합보험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평가를 얻는다. 어린이보험이나 실비보험 등 기존 보험은 그대로 두고 있는 보장만 골라 가입하거나 유행하는 질병의 치료비 위주로 가입해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영유아보험은 영유아기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1~3년 원하는 기간만큼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며 “초중학생보험은 기존 시장에 있던 어린이보험과는 달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최적화된 보험”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과 ABL생명은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상품을 선보였다. 현대해상의 ‘굿앤굿여성건강보험’은 여성의 각 생애주기에서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을 보장한다. 임신·출산기에 는 ▲유방 ▲생식기 등을 보장한다. 폐경기에는 ▲정신질환, 노화기에는 ▲근육 ▲관절 ▲뇌 질환 등을 보장한다.

ABL생명의 ‘THE톡톡튀는여성 건강보험’은 부위별 암진단 보장, 여성 다빈도 질환과 함께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여성 생애주기 맞춤형 상품이다. 특약을 통해 암의 종류를 9개 영역으로 분류해 암 진단비를 그룹별 각 1회씩 최대 9회 보장한다. 임신부터 출산을 위해 인공수정·체외수정 치료비와 산후관리지원금을 보장한다.

ABL생명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A

BL생명이 창립70주년을 맞아 개발한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전했다.

고령자를 위한 치매간병 및 요양, 종신보험으로 사망 보장과 생애주기별 자금 활용 가능 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0월 치매 예방과 장기요양까지 보장을 제공하는 ‘신한치매간병보험 ONE더케어’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특약 가입 시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도 같은 달 사망 보장 기능을 넘어 노후자금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밸런스 종신보험’을 선보였다. 특정 시점별 사망보험금 증액 서비스로 고연령시기 필요한 사망 보장에 최적화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종신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망 보장은 물론 고객의 상황별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 생애주기별 자금 활용 밸런스가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 국민의 파트너
금융파트너

퇴직연금, KB증권으로 똑딱! 오세요

현금으로 바꿀 필요 없이,
갖고 있는 연금상품 그대로 옮겨주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작되니까요

**퇴직연금도,
커져라 똑딱! 깨비증권**



ETF, 채권, 리츠 등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비대면 가입 시
IRP 제도수수료 평생 무료

*펀드보수 등 추가 발생 가능

모바일에서 연금계좌
24시간 개설 가능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082호(2024.10.11~2025.10.10)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 별 보호상품 한산) 보호됩니다. *투자 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자산 가격 변동>** ***<학률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 손실(일부 또는 전액)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IRP 수수료는 연 0.20% ~ 0.25%** (단, 비대면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 ***ETF 거래 시 HTS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0.1278% + 2,000원, 모비일 0.1978%** 기타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펀드보수 등 추가 발생 가능** ***IRP 계좌개설 24시간 가능(단, 23:40~00:10 제외)** ***동일한 퇴직연금제도 내 이관·수관회사 공동 판매 상품만 실물이전 가능**

KB증권

“녹색산업 수출 20조 시대 개막”

尹정부 임기 반환점

환경부,尹정부 주요성과·계획 발표
녹색산업 협의체와 글로벌 시장 선점

환경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현장과 기술 혁신에 기반한 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20조원 시대를 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환경 정책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되 그간의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현장과 고리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먼저, 현장과 고리된 획일적 환경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합리적 개선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에 맞춰 조정하고,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위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영향의 정도에 따라 절차를 차등화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하고, 소규모 사업은 지역 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첨단 산업 지원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업종에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하고 적용했다. 그 결과, 2030년까지 약 2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단지에는

용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구성해 평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제 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책임 있게 수행하면서, 실현 가능성과 혁신 기술 개발을 고려해 부문별 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4월에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의 저탄소 체질 개선,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최근 2년 연속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손옥주 실장은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며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 해수淡化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해 지난해 수주·수출실적 20조원을 달성했다. 올해에는 10월 기준으로 20조원을 이미 돌파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정책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책 보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기후위기 적응의 양극화를 해소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